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

목 차

■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민생경제 : G7 국가와 한국	3
3. 시사점	15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김 수 형 연 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

□ 동 향 분 석 팀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

■ 개요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8~2021년 사이에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생경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G7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민생경제의 모습이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 실업, 경제고통지수 등의 분야들을 대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사용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보고서의 지표항목들이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음을 밝힌다.

■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민생경제 : G7 국가와 한국

(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평균임금은 2006년 이후 임금 증가속도가 저하되었으며 임金的 절대적 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여건) 과거에 비해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분배 및 사회복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율)은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2006년) 이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년 NEET 비율(전체 15~29세 청년 인구 중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은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G7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는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

(2006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한국 경제가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경제의 개선 속도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한국과 G7 국가 민생경제 지표 비교 >

분야	지표 항목	최근 한국 수치(A)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B)	비교	평가
임금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5.8\$ (2016)	7.1\$	81.7%	취약
	실질 평균임금	32,399\$ (2016)	39,992\$	81.0%	취약
근로여건	연간 근로시간	2,069시간 (2016)	1,713시간	120.8%	취약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10.1% (2014)	25.2%	15.1%p	취약
분배 및 사회복지	지니계수 개선율	11.4% (2014)	31.5%	20.1%p	취약
	상대적 빈곤율	14.4% (2014)	11.8%	-2.6%p	취약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0.4% (2014)	20.7%	10.3%p	취약
청년실업	청년실업률	9.8% (2016)	10.9%	1.1%p	양호
	청년 NEET 비율	18.0% (2013)	14.5%	-3.5%p	취약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	4.7p (2016)	8.5p	3.8p	양호

자료 : OECD, IMF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주1)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미국 구매력평가(PPP) 달러 기준

2)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실질 평균임금, 연간 근로시간에 대한 비교는 비율(A/B)로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표 항목에 대한 비교는 격차(B-A)를 %p와 p로 표시

3) 평가는 해당 지표에 대한 최근 한국의 수치가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에 비해 양호할 경우 '양호', 취약할 경우 '취약'으로 표시했으며 격차에 대한 평가나 거시적 환경의 차이 등은 고려되지 않음.

■ 시사점

첫째,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만성적인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개요

○ 한국은 곧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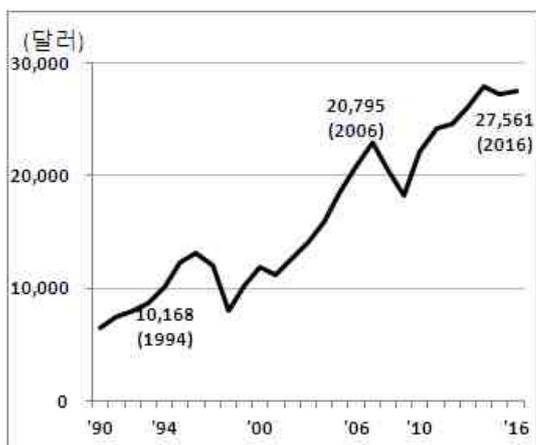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면서 곧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1994년에 1만 달러, 2006년에 2만 달러에 도달함
- 한국은행 및 World Bank 통계상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각각 27,561달러, 27,539달러로 아직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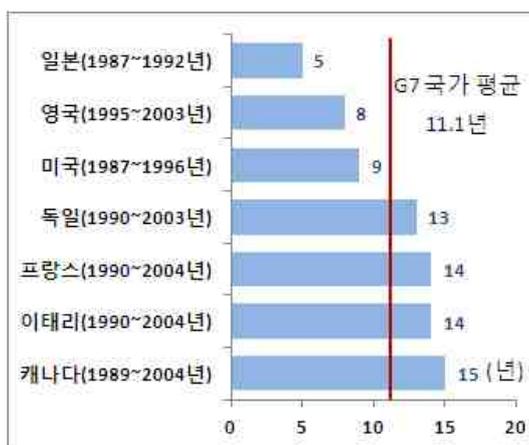
- G7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3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평균 11.1년 소요¹⁾

- 일본은 80년대 말~90년대 초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1인당 GNI 3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3만 달러까지 평균 12.2년이 소요됨
- 한국은 2018~2021년 사이에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²⁾되며 이 경우 12~15년이 소요되어 G7 국가의 평균 3만 달러 도달 기간과 유사하거나 다소 지연된 수준임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 < G7 국가 1인당 GNI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 소요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World Bank 자료 이용).

1) 이하 분석은 World Bank 기준.

2) 현재까지의 1인당 GNI 성장세, 향후 경제 및 환율 전망 등을 고려함.

○ 우리나라 민생경제의 모습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지 G7 국가들과 비교

- 민생경제를 각 분야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해 추이를 분석하고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도달 시기와 비교해 한국 민생경제의 보완점을 모색
 - 한국의 1인당 GNI 2만~3만 달러 시기의 민생경제 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여 경제가 발전함에 따fms 민생경제의 각 측면의 추이를 분석함
 - G7 국가와 한국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민생지표를 비교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비교 지표 항목) 임금,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실업, 경제고통지수 등 민생경제에 있어 주요한 측면에 대해 G7 국가와 비교
 - 임금 측면 : 근로자의 최저 임금 및 평균 임금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수준 및 경제적 생활수준을 파악함
 - 근로여건 측면 : 근로환경의 주요 요소인 근로시간과 실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³⁾을 비교하여 근로여건을 파악함
 - 분배 및 사회복지 측면 : 소득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국가의 소득재분배 및 사회안전망 기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니계수⁴⁾ 개선율⁵⁾, 상대적 빈곤율⁶⁾, 사회복지지출비율 및 국민부담률⁷⁾을 통해 소득재분배, 빈곤, 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함
 - 청년실업 측면 : 최근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청년실업률 및 청년 NEET⁸⁾ 비율을 비교함
 - 경제고통지수 :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두 변수의 합으로 정의되는 경제고통지수 (Okun, 1975)를 비교함

3) 실업전 급여에 대한 실업급여의 비율.
 4)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낮은 값을 가짐.
 5) 지니계수 개선율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지표로 사용됨.
 6)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율.
 7)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조세/경상GDP)+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으로 계산되며 국민의 실질적 조세부담을 나타냄.
 8)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은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분석들은 존재하지 않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들을 대표하는 경제지표를 사용
 - 본 보고서상의 지표 항목이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음
- 민생경제 지표에 대한 한국의 추이와 G7 선진국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민생경제 지표를 비교하여 향후 민생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민생경제 : G7 국가와 한국

1) 임금

-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
 - 한국 :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커 실질적인 법정 최저임금 또한 상승 추세
 - 법정 최저임금은 1인당 GNI 2만 달러 시기(2006년) 3,1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6,470원까지 인상됨
 - 2010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실질적인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함
 - 한국 vs G7 : 2016년 한국의 실질구매력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5.8달러이며 G7 국가 평균(7.1달러)의 81.7% 수준으로 취약
 -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며 G7 국가(이태리, 독일 제외) 중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G7 평균의 81.7%로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 수준이 취약함

< 한국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추이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은행.
 주 : 2004, 2005년은 1월~8월 최저임금과 9월~12월 최저임금의 가중평균으로 계산.

> < G7 국가의 1인당 3만 달러 시기 실질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자료 : OECD.
 주1) 이태리, 독일은 자료 부재로 제외함
 주2) CPI 및 구매력평가 기준(PPP) 환율을 이용해 2015년 미국 달러 구매력 기준 실질화.

○ (평균임금)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질 임금 및 실질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정체

- 한국 : 실질 평균임금은 1인당 GNI 2만 달러 시기 이후로는 정체되어 경제 성장에 비해 실질적 근로자 생활수준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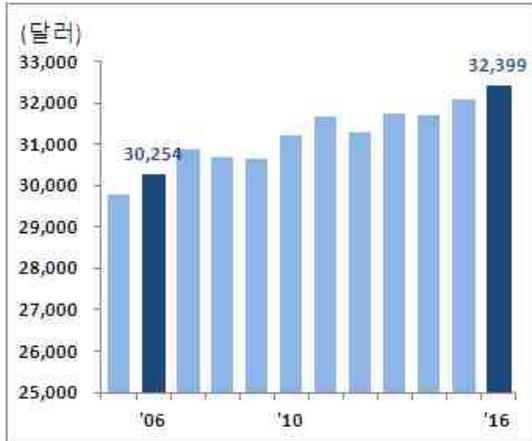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등 국내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악화됨
- 1인당 GNI 1만~2만 달러 시기(1994~2006년)에 실질 평균임금 상승률은 32.8%(연평균 2.4%)로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보임
- 2006~2016년까지 평균임금 상승률은 7.1%(연평균 0.7%)로 평균 임금의 성장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 이후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 vs G7 : 2016년 한국의 실질구매력 기준 평균임금은 32,399달러이며 G7 국가 평균(39,992달러)의 81.0% 수준으로 실질 평균임금이 낮음

- 1인당 GNI 2만~3만 달러 시기 평균임금의 증가율 측면에서도 G7 국가의 증가율 평균 12.6%(연평균 1.1%)에 비해 한국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7.1%(연평균 0.7%)로 선진국에 비해 임금 증가속도가 느림

- 실질 평균 임금의 절대적 수준 및 임금의 상승폭이 G7 국가에 비해서 낮아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개선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의 연간 평균 임금 추이 > <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연간 평균 임금 >



자료 : OECD.
주 : CPI 및 구매력평가 기준(PPP) 환율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달러 구매력 기준 실질화.



자료 : OECD.
주 : CPI 및 구매력평가 기준(PPP) 환율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달러 구매력 기준 실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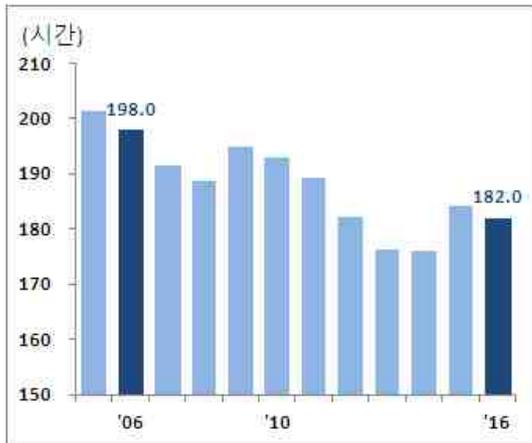
2) 근로여건

○ (근로시간) 과거에 비해 개선을 이룬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근로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긴 편에 속해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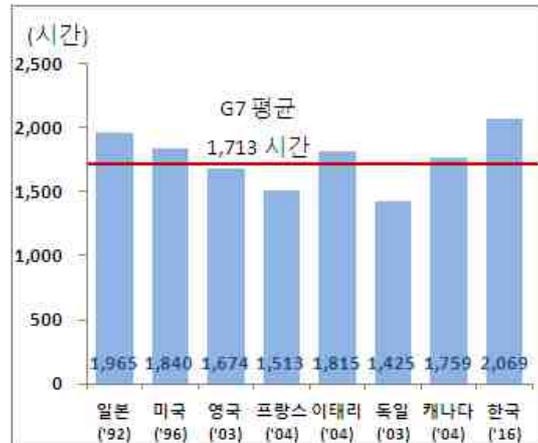
- 한국 : 월간 근로시간은 단축되어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는 추세
 - 월간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1인당 GNI 1만 달러 시기(1994년)에 215.0시간이었으나 2만 달러 시기(2006년)에 198.0시간, 최근(2016년) 182.0시간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한국 vs G7 : 2016년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G7 국가 평균(1,713시간)의 120.8%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음
 - 한국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G7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수준이며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음
 - 한국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인 1,713시간에 비해 연간 356시간(17.2%)을 초과함

< 한국의 월간 근로시간 추이 > < G7 국가의 1인당 3만 달러 시기 연간 평균 근로시간 >



자료 : 통계청.
주 :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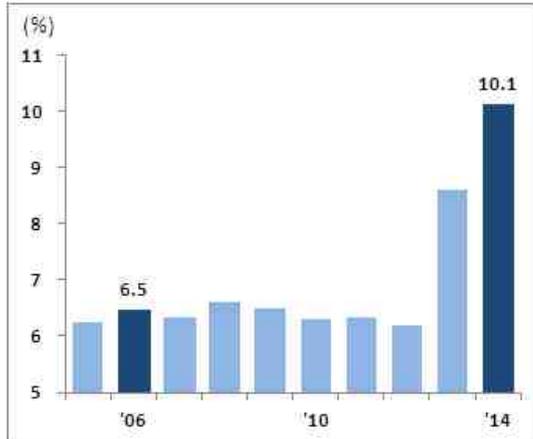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시간제 근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형태를 포함.

○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실업급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짧아 실업에 대한 보호가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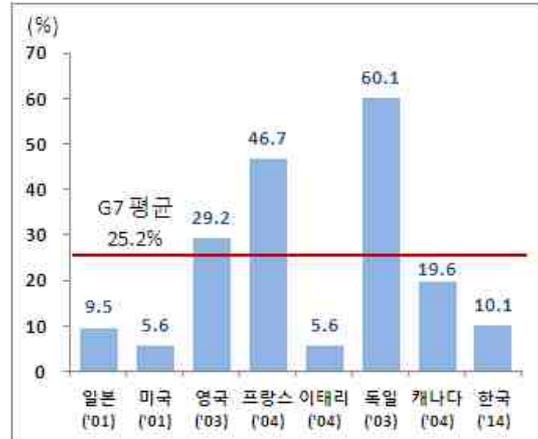
- 실업에 대한 보호수준은 근로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NRR)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호의 수준을 파악
- 한국 :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2013년 이후 급격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
 -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6%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에는 10.1%까지 상승함
 - 최근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질적인 실업에 대한 보호는 취약함
- 한국 vs G7 : 2014년 한국의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10.1%로 G7 국가 평균(25.2%)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수준에서 15.1%p 확대시켜야 함
 -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G7 국가 평균 25.2%의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실업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임

-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6개월 근무)은 관대한 편이나 지급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8개월로 짧음⁹⁾

< 한국의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NRR) 추이 >



< G7 국가의 1인당 3만 달러 시기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NRR) >



자료 : OECD.

- 1) 실업전 소득에 대한 5년간 실업급여 수혜액의 비율
- 2) 실업급여 외에 다른 사회보장 수혜 대상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 OECD.

- 1) 실업전 소득에 대한 5년간 실업급여 수혜액의 비율
- 2) 실업급여 외에 다른 사회보장 수혜 대상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함
- 3) 데이터 취급의 한계로 일본, 미국, 한국은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연도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
- 4) 2014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NI는 27,811달러.

3) 분배 및 사회복지

○ (지니계수 개선율) 과거에 비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상황

- 소득불균형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¹⁰⁾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적 개입을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가 요구되며 지니계수 개선율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정도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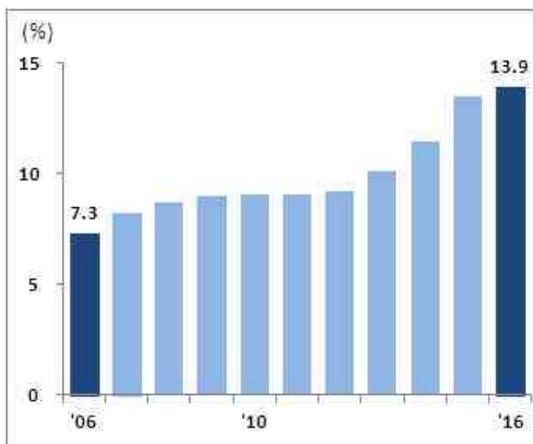
- 한국 : 지니계수 개선율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소득재분배 기능은 2006년 이후 강화된 것으로 판단

9)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2016).

10)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현대경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의 강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분석됨.

- 2013년 이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9%로 2006년에 비해 조세·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층 과세 강화, 기초연금 도입,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복지 확충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최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었음¹¹⁾
- 한국 vs G7 : 2014년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1.4%¹²⁾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G7 국가 평균(31.5%)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 개선율을 현재수준에서 20.1%p 확대시켜야 함
- 한국의 2014년 지니계수는 0.302¹³⁾로 양호한 수준이나 지니계수 개선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조세·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함을 시사함
 -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소득세 비중이 낮고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양호한 점¹⁴⁾ 등이 지목됨¹⁵⁾

<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1) 지니계수 개선율은 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
 2) 전체가구 기준.

<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지니계수 개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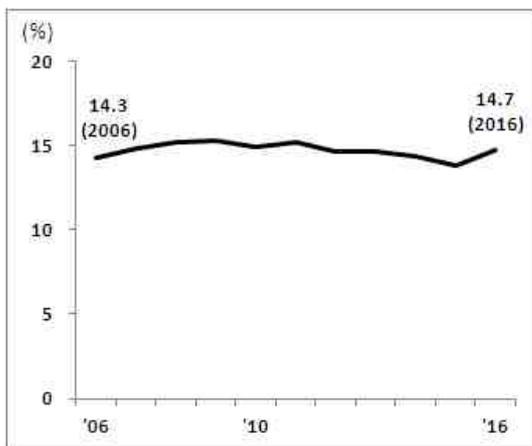


자료 : OECD.
 주1) 전체가구 기준
 2) 데이터 취급의 한계로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은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연도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
 3) 2014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NI는 27,811달러.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9월 22일).
 12) 통계청에서는 2016년까지 상대적 빈곤율을 발표했으나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자료를 인용했으며 OECD 자료상 가장 최근의 한국 상대적 빈곤율 자료는 2014년.
 13) 2016년 지니계수(통계청)는 0.304.
 14) 201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은 0.475이며 한국은 0.336.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9월 22일).

- (상대적 빈곤율)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2006년) 이후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높은 수준
- 최근 양극화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 및 빈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
- 한국 :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높은 상황이며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
 - 2006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13~15%대에서 큰 악화나 개선을 보이지 않음
 - 201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다소 높은 상황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6.5%로 매우 높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함
- 한국 vs G7 : 201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4%¹⁶⁾로 G7 국가 평균(11.8%)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2.6%p 가량 빈곤율 축소시켜야 함
 - 최근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높으며 31개 OECD 회원국¹⁷⁾ 내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임
 - 또한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OECD 회원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¹⁸⁾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함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체가구 기준.

<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상대적 빈곤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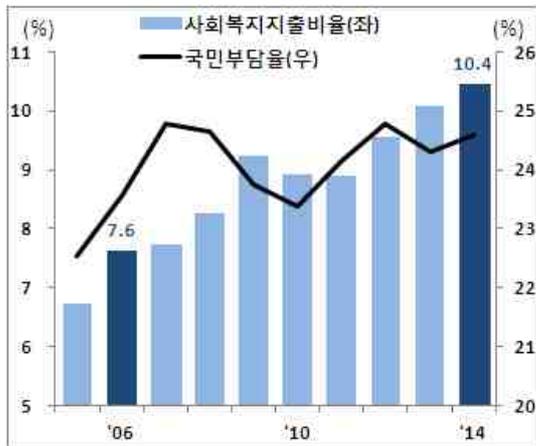


자료 : OECD.
주1) 전체가구 기준
주2) 데이터 취급의 한계로 일본, 한국은 각각 1995, 2014년 자료를 사용
주3) 2014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NI는 27,811달러.

16) 통계청에서는 2016년까지 상대적 빈곤율을 발표했으나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자료를 인용했으며 OECD 자료상 가장 최근의 한국 상대적 빈곤율 자료는 2014년.
17) 2013년 기준이며 호주, 헝가리, 일본, 멕시코는 자료 부족으로 제외되었고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6%.
18)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4.1%로 한국의 49.6%와 큰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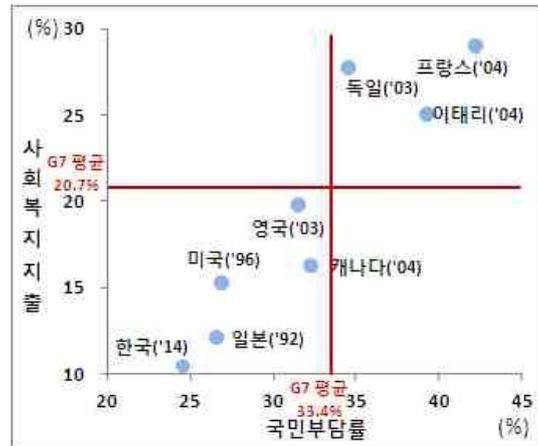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
 - 한국의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해감에 따라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기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비율과 국민부담률을 비교하여 복지지출과 그에 따른 조세부담의 규모를 파악
 - 한국 :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향후 복지수요 증대 및 고령화 진행에 따라 복지지출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4%이며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24.6%로 확대됨
 - 외환위기(1998~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시기 등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 빠르게 상승됨
 - 소득증대 및 고령화 진행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vs G7 :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4%로 G7 국가 평균(20.7%)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수준에서 10.3%p 사회복지지출비율을 높여야 함
 -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과 복지지출 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부담률이 증대되었음
 -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증가해왔음에도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국민부담률 및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속함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은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평균인 20.7%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면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부담(국민부담률) 또한 증가함

< 한국의 복지지출 추이 >



자료 : OECD.

<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복지지출 >



자료 : OECD.

주 : 한국은 데이터 취급의 한계로 2014년 자료를 사용했으며 2014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NI는 27,811달러.

4) 청년실업

○ (청년실업률 및 NEET 비율)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G7 국가에 비해 NEET 비율이 높은 수준

-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확대되어 사회갈등 및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 지연을 유발하고 있어 청년실업률 및 NEET 비율을 통해 청년 실업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

- 한국 :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저하, 노동시장 미스매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세이며 청년 NEET 비율 또한 높음

· 최근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 NEET 비율 18%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음

· 경제성장속도의 추세적 하락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수 감소와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이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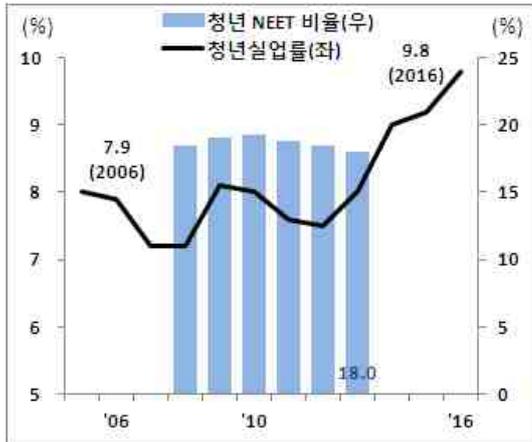
- 한국 vs G7 : 2016년 한국의 청년실업률 및 2013년 NEET 비율은 각각 9.8%, 18.0%로 청년실업률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며, 청년 NEET 비율을 G7 국가 평균(14.5%)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수준에서 3.5%p 감소시켜야 함

· 한국의 2013년 청년 NEET 비율은 18.0%로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의 평균 NEET 비율(14.5%) 에 비해 3.5%p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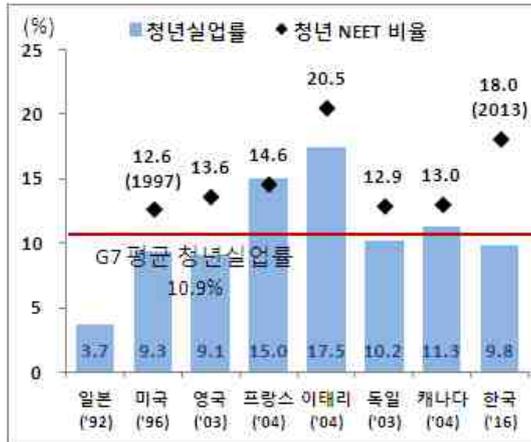
- 한국 청년실업률은 G7 평균 10.9%보다 낮아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에 비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던 점과 한국의 특수성(징병제,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함

< 한국의 청년 실업률 및 NEET 비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OECD.
 주) 1) 2006년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달성함
 2) 15~29세 청년 기준
 3) 청년 NEET 비율은 자료 부족으로 2008~2013년 까지만 표시.

<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청년 실업률 및 NEET 비율 >



자료 : OECD.
 주) 1) 15~29세 청년 기준
 2) 청년 NEET 비율 자료의 한계로 한국과 미국은 각각 1997, 2013년 자료를 사용했으며 일본은 제외
 3)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NI는 25,890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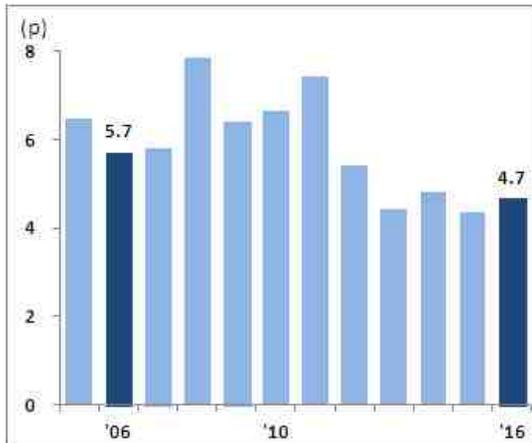
5) 경제고통지수

○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개선되는 추세이나 최근 실업률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고통지수가 상승

- 한국 : 경제고통지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나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경제고통지수가 상승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산업 구조조정, 경기 불안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2014년 이후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경제고통지수가 상승함
- 한국 vs G7 : 2016년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4.7p로 G7 국가 평균(8.5p)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
 -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평균 대비 낮은 편임

- 미국, 영국, 이태리,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1인당 GNI 2만~3만 달러 시기에 경제고통지수가 하락함
- 한국은 1인당 GNI 2만~3만 달러 시기에 경제고통지수는 하락했으나 이는 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에 기인했으며 실업률은 2006년 3.3%에서 2016년 3.7%로 상승함

< 한국의 경제고통지수 추이 >



자료 : IMF.

< G7 국가의 1인당 GNI 2만~3만 달러 시기 경제고통지수 >



자료 : IMF.

6) 종합평가

-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생경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G7 선진국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
 - 실업률 및 평균 임금 등 국민의 생활수준에 직결되는 부분의 개선세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임금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실질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은 다소 미흡함
 - 평균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체율 등의 근로여건은 최근 개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청년실업률이 상승세에 있으며 청년 NEET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청년층의 경제적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물가상승률은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 악화 및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인해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부실하며 사

회복지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며 특히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 지니계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조사의 한계로 인해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하며¹⁹⁾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함
-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및 국민부담률은 증가되어 왔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의 한국과 G7 국가 민생경제 지표 비교 >

분야	지표 항목	최근 한국 수치(A)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B)	비교	평가
임금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5.8\$ (2016)	7.1\$	81.7%	취약
	실질 평균임금	32,399\$ (2016)	39,992\$	81.0%	취약
근로여건	연간 근로시간	2,069시간 (2016)	1,713시간	120.8%	취약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10.1% (2014)	25.2%	15.1%p	취약
분배 및 사회복지	지니계수 개선율	11.4% (2014)	31.5%	20.1%p	취약
	상대적 빈곤율	14.4% (2014)	11.8%	-2.6%p	취약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0.4% (2014)	20.7%	10.3%p	취약
청년실업	청년실업률	9.8% (2016)	10.9%	1.1%p	양호
	청년 NEET 비율	18.0% (2013)	14.5%	-3.5%p	취약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	4.7p (2016)	8.5p	3.8p	양호

자료 : OECD, IMF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주1)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미국 구매력평가(PPP) 달러 기준

- 2) 시간당 실질 법정 최저임금, 실질 평균임금, 연간 근로시간에 대한 비교는 비율(A/B)로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표 항목에 대한 비교는 격차(B-A)를 %p와 p로 표시
- 3) 평가는 해당 지표에 대한 최근 한국의 수치가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 평균에 비해 양호할 경우 '양호', 취약할 경우 '취약'으로 표시했으며 격차에 대한 평가나 거시적 환경의 차이 등은 고려되지 않음.

19) 현행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한 소득분배 지표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과소평가되는 점과 금융소득 파악이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과소평가되었으며 실제 지니계수는 이보다 높다는 비판이 존재(김낙년 외, 2013)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상 2015년 지니계수는 0.341로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3. 시사점

첫째,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 성장 전략에 있어 지표상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체감 경제성장이 고려되어야 함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임금의 일자리를 확대
 -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 안전, SOC 등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증대
- 대·내외적 충격에도 국민의 생활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대외 충격의 주요 파급경로인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여 대외적 충격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 불안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²⁰⁾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을 확충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한국은 요소투입의 증가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으며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추구해야 함
 - 교육, R&D 등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에 직결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확충
- 창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20) 누진세, 실업급여 등과 같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율이나 정부지출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조세수입 및 재정지출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경기를 안정시켜주는 기능.

- 창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 금융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
- 창업 및 스타트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기술성, 상품성 등 미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 실업급여, 직업교육 등 고용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실패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 및 스타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복지 지출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복지의 질적인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부정수급 등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개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을 감축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등 기초적인 요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빈곤을 감축
- 복지 지출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를 야기하므로 복지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등 조세부담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

넷째,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만성적인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기존의 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위주의 고용정책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

하여 고용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추구하는 고용정책이 요구됨

-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과 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생산성과 고용창출여력을 향상시켜야 함
 - 한국의 경우 근로시간은 긴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근로시스템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출산·육아휴직, 안식년 등 휴직제도를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근무효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
- 세제혜택, 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함
 -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규제 완화로 신성장동력 육성
- 청년실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 및 구직포기로 인한 인적자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함
 -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 **HRI**

김수형 연구원 (2072-6217, soohyung@hri.co.kr)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